

“직장 내 괴롭힘 도와주는 이 없었다”

광주청년유니온, 업체 직장 갑질 고발 기자회견 업체 “상사와 해당 직원간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

광주 한 웨딩업체에서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언·폭행하고 의도적인 업무배제와 괴롭힘을 일삼아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하고 나섰다.

광주청년유니온은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A웨딩컨벤션 직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청년유니온 측은 따르면 2017년 6월 A웨딩컨벤션에 입사한 피해자 B씨는 2019년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휴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아무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 “벽을 보고 있으라”는 벽면 근무를 지시받았다.

업체 측은 평소 웨딩업체 상담과 예약 업무를 맡아온 B씨에게 전화기와 노트북도 없이 온종일 벽만 보고 앉아있게 시켰다.

B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껴 눈물만 흘려야 했다.

이후 6월5일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B씨는 같은달 22일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또 한 번 무너졌다. 업체 이사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와 외과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6월24일 B씨가 노동청에 폭행 사건을 신고하자 괴롭힘은 더 집요하고 심해졌다.

부당한 퇴사를 종용하고 직책을 강등하는 등 B씨가 회사에서 제발로 나가도록 괴롭힘을 지속했다.

가해자인 업체 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B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오는 8월까지 병가 중이다. 하지만 B씨가 복귀하면 괴롭힘의 악몽은 다시 시작되지만, 고용노동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청년유니온은 “현행법의 한계와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 회피 속에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이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한 웨딩업체의 직장 내 갑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을 때 B씨가 병가 중이었다는 이유로 어떤 조치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 측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는 피해 사실의 신고, 조사 및 피해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며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책임 회피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 광주시,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직장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상사와 해당 직원 간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회사도 오해가 있으면 풀라고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고 답했다.

신봉우 기자

술에 취해 지인 흥기로 찢은 40대 징역 5년

아무 이유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흥기로 찢려 숨지게 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지인 B씨(45)를 흥기로 수차례 찢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여행용 가방에 보관 중이던 흥기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는 B씨를 숨지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고, B씨의 적극적인 방어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손에 흥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전에도 흥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으며, 해당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서 치안센터에 돌멩이 던진 5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경찰서 치안센터에 돌을 던지는 등의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분쯤 광주 서구 관천치안센터에서 “세상살이가 힘들다”며 센터 출입문에 돌을 세차레 던져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주저지 없이 노숙을 하던 A씨는 신변을 비관해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부갈등 시어머니에게 흥기 휘두른 며느리

10여년 간 고부갈등을 겪던 70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격분해 흥기를 휘두른 50대 며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붙잡힌 A씨(5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화성 봉담읍 소재 자택에서 시어머니인 B씨(75)를 흥기로 찢려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B씨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날 B씨가 “집안일을 왜 돕지 않느냐”라는 잔소리에 격분, 복부를 1차례 찢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자택 거실에서 언쟁을 한 후 방으로 들어간 B씨를 따라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A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의 딸과 남편은 해당시간에 각자 방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20여년 전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감여성이 문 안 열어” 차 3대에 분풀이한 3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골목길에 주차된 차에 올라가 차를 마구 짓밟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2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20분쯤 광주 서구 내방동 한 주택가에서 차량 3대에 올라타 전면유리와 보닛을 짓밟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닛 위에서 날 뿜 충격으로 차는 심하게 찌그러졌고 전면유리가 모두 파손 돼 총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자택 인근에 주차된 차를 마구잡이로 손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동중 범죄로 출소해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두환 재판 증인, 법정 거부 비검해”

이희성 5·18 당시 계엄사령관 등 핵심 증인 불출석

‘5·18헬기사격’을 증언하고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20일 “전두환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서서 증언해야 하지, 법정을 거부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밝혔다. 조 신부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판기일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재판 결심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증인으로 서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재판이 지연된다면 재판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신부는 “재판부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국민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9월에 재판 결심이 나오리라 기대하지만, 저들의 재판 기피를 계속 받아들여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순천지청 검사가 직권으로

아이 출생 신고한 이유

검사 직권 출생신고는 순천지청 최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거부한 친모를 대신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 수사 과정에서 20대의 미혼모 A씨가 지난 2017년 11월 출생한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년 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이나 아동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검찰은 친모에게 1년 3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출생신고를 권유했음에도 친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검사의 직권으로 7월15일 출생신고를 했다.

순천지청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2016년 관련법 개정 이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율리 검사는 지난 5년간 두 자녀(현재 17세와 9세)를 폭행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채 방임한 40대 친부와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수사 이후 계속 알콜중독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이상 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아동 측은 지난해 11월쯤 국선번호사를 통해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피해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찰에 친권상실청구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의사를 존중해 지난 10일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